


□공동대표:권영준·정미화·신철영·정념·김형태 □상임집행위원장: 김 호 □정책위원장:임효창 □사무총장:윤순철
03085서울·종로·동숭3길26-9 Tel.02-765-9731 Fax.02-741-8564 www.ccej.or.kr  withccej 후원 008-01-0567-507(국민)

- 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발신 : 경실련 정책위원회(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 문의 :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오세형 팀장, 윤은주 간사, 02-766-5629)
- 시행 : 2021.05.18(총2매)

〈경실련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2개월 운영 현황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 51건 중 36건 관계기관에 이첩
“내부정보 이용한 개발 예정지 땅 투기신고 가장 많아”

- 농지·토지 투기의혹 제보 36건으로 전체 71%
- 수도권 21건·비수도권 30건, 경기 13건으로 가장 많아

경실련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과 함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자 지난 3월 17일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시민들은 신고센터 개설 첫날부터 꾸준히 제보를 하였으며 지난 2개월 동안 총 51건을 제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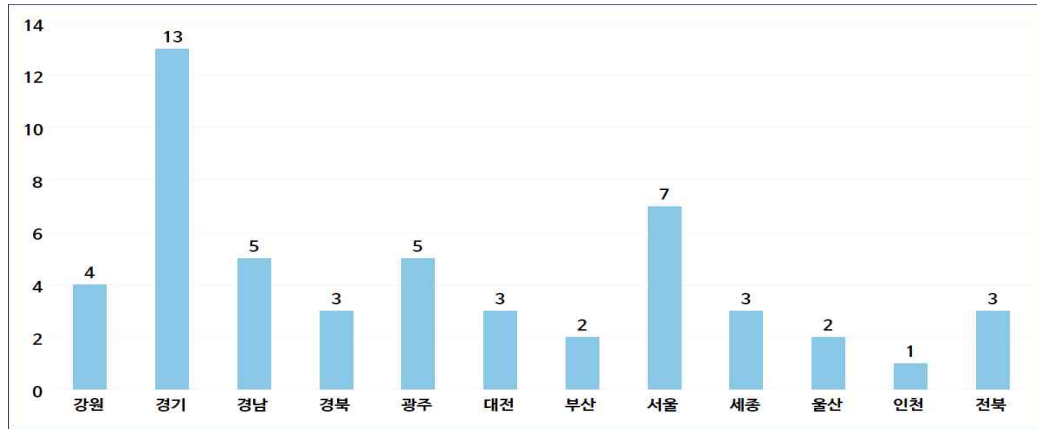
[표1]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제보 부동산별 현황

구분	건물	농지	아파트	주택	토지	합계
건	4	12	7	4	24	51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를 분석하면, 부동산별로는 건물 4건, 농지 12건, 분양권 포함 아파트 7건, 주택 4건, 토지 24건 등이었으며, 이중 토지와 농지가 36건으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례가 많았고, 농지법 위반, 일반 부동산 투기 및 재건축, 재개발 비리 의혹들도 다수

있었다. 투기의혹 대상자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경찰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국가공무원, LH와 SH, 도시개발공사 직원 등 다양하였다.

[그림1]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제보 지역별 현황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21건, 비수도권 지역은 30건으로 비수도권 제보의 비중이 59%였다. 그리고 경기도가 13건으로 전체 51건 중 25%였으며 LH 사건이 발생한 광명을 비롯해 시흥, 화성, 군포, 양평, 하남 등의 제보가 있었다. 서울 7건, 경남과 광주가 각각 5건, 강원 4건, 경북, 대전, 세종, 전북이 각 3건씩, 부산, 울산이 각 2건, 인천이 1건 등이었다.

경실련은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 신고자 또는 신고제보자의 필수정보가 없거나 공직자가 대상이 아닌 경우 그리고 단순 질의나 상담 등을 제외하고 투기의혹이 상당하여 수사가 필요한 사례 총 36건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사례들은 서울경찰청으로 1차 18건(4.16), 2차 12건(5.6), 3차 6건(5.17) 등 총 36건을 이첩하였다. 서울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은 경실련이 제보한 사례들을 수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린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신고

- 신고센터 홈페이지(<http://ccej.or.kr/singo>), 이메일(singo@ccej.or.kr), 전화☎ 02-766-5629)
- 전화 신고 : 02-766-5629, 상시 접수(09:00~18:00)

2021년 5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